



■ 최근 북한 경제정책 특징과 통일에의 시사점

■ 2050, 통일 한국의 경제적 미래

1.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 추정
2. 성장회계로 본 산업의 구조적 변화
3. 통일 한국의 12대 유망산업
4. 최근 북한 경제정책 특징과 통일에의 시사점

발행인 : 하태형
편집주간 : 한상완
편집위원 : 주원,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02-2072-6306)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최근 북한 경제정책 특징과 통일에의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활발해지는 통일 논의	1
2. 최근 북한 경제정책 특징	2
3. 최근 북한 경제정책 평가	7
4. 시사점	9
【별첨】	10
【HRI 경제 통계】	11

< 요약 >

■ 활발해지는 통일 논의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변화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통일기반 구축 논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북한은 주민생활 향상과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면서 대내외적인 개혁·개방 확대를 추진 중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도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면서 통일의 의미를 경제적 측면에서 강조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가 바람직한 통일 방향에 얼마만큼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최근 북한 경제정책 특징

(경제부처 권한 강화) 주민생활 향상과 경제 성과 제고를 위해 내각책임제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관료 우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부문 내각의 권한 강화를 통해 사실상의 '경제사령부'로 격상되었다. 김정은 제1비서는 2012년 '4.6 담화'에서 내각에서 결정된 경제정책의 확고한 추진과 국가재정을 내각에 집중시킬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박봉주 내각총리를 비롯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당시 개혁·개방을 주도한 경제·기술관료 대부분을 재임용하여 내각책임제의 추동력을 확보했다.

(시장경제 시스템 및 경쟁체제 도입) 농업과 기업소 부문에 부분적 시장경제 시스템 및 경쟁체제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다. 6.28 농업개혁 조치는 협동농장 개혁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이 목적이며, 분조관리제 개선과 수확물의 자율처분권 확대 등이 핵심이다. 12.1 기업소개혁 조치는 공장·기업소가 독자적으로 생산품을 결정하고, 가격과 판매 방법, 수익·배분도 자체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 특징이다.

(외자유치 촉진) 외자유치와 수출 확대를 위해 '경제개발구법' 제정 등의 법·제도 정비와 함께 외자유치기구를 정비하고 특구정책도 확대했다. 법·제도 정비에 있어서는 3통(통행·통신·통관)의 자유보장 등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제·개정하였다. 한편 경제개발구법 제정으로 단일 법 규정에 근거해 각 지방에서 외자유치를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등 외자유치 기구를 정비했고, 경제특구 활성화 조치로 지방 특성별 소규모 특구를 추가로 추진하였다.

■ 최근 북한 경제정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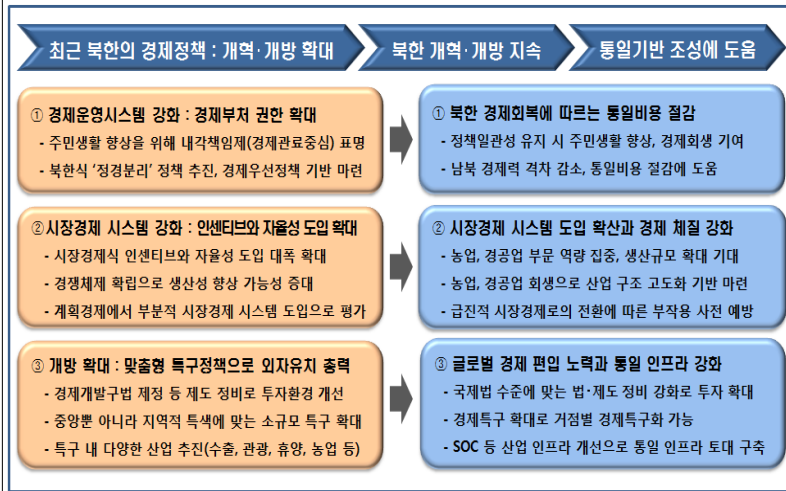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은 과거에 비해 대내 경제개혁을 촉진시키고, 대외 개방 정책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운영시스템 강화 : 경제부처 권한 확대) 최근 북한은 주민생활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내각책임제를 강화했고, 이는 북한식 '정경분리(政經分離)'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북한의 경제회생 우선 정책은 남북한 경제력 격차 해소 및 북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경제적 투자비용' 등 통일비용 절감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경제 시스템 강화 : 인센티브와 자율성 도입 확대) 인센티브와 자율성 도입 확대 등 시장경제 시스템 강화는 기존의 중앙계획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시장경제 시스템 도입 확산은 단기적으로는 농업·경공업 부문의 회생을,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강화와 산업 구조 고도화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된다. 나아가 점진적 시장경제 시스템 도입은 본격적인 시장경제 전환에 따른 부작용 완화와 남북 간 이질적인 제도를 통합하는 데 소요되는 **'제도통합비용'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개방 확대 : 맞춤형 특구정책으로 외자유치 총력) 경제개발구법 제정 및 전국 단위의 맞춤형 경제특구 확대 등은 보다 적극적·현실적인 외자유치정책으로 평가된다. 국제 수준에 맞는 법·제도 준비는 외자유치를 통한 자본 확충은 물론, 북한경제의 **글로벌 경제 편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소규모 맞춤형 경제특구 정책은 지역의 생산기반 확충에 도움이 되며, 외자유치를 통한 산업인프라 개선은 통일인프라 조성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이 통일기반 조성에 미치는 영향 >



■ 시사점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가 지속되어 **실제적인 통일기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최근 북한의 외자유치를 통한 대외개방 정책이 확산, 안정화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남북경협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 개혁·개방경제로 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의 선제적 대북투자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남북 상호 신뢰 회복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는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 대비 남북한 갈등을 줄여갈 수 있는 다양한 통합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1. 활발해지는 통일 논의

○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변화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통일기반 구축 논의 분위기 조성

-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은 주민생활 향상과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면서 대내외적인 개혁·개방 확대를 추진 중

- 김정은 제1비서는 최초의 대중연설(2012. 4. 15)에서 “다시는 주민들의 허리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주민생활 문제 해결에 주력
- 이에 따라 최근 북한은 대내적으로 내각책임제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과 기업소 부문의 인센티브와 자율권 확대 등 새로운 경제개혁정책을 추진 중
- 대외적으로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 제정에 이어, 11월에는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설치 등의 경제개방정책을 발표

- 박근혜 대통령도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면서 남북관계와 통일의 의미를 경제적 측면에서 강조

- 평화통일 기반구축은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임
-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경제회생 및 주민지원에 방점을 둔 '드레스덴 구상'을 수립
- 향후 박근혜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 이를 통해 통일한국의 경제 대도약 발판을 구축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최근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가 바람직한 통일 방향에 얼마만큼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최근 북한 경제정책 특징

① (경제 부처 권한 강화) 주민생활 향상과 경제성과 제고를 위해 내각 책임제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관료 우대 정책을 추진

- 경제부문 내각의 권한 강화를 통해 사실상의 '경제사령부'로 격상
 - 김정은 제1비서는 집권 이후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내각책임제 강화를 밝힘
 - 2012년 '4.6 담화'에서 내각에서 결정된 경제정책의 확고한 추진과 이를 위해 국가재정을 내각에 집중시킬 것을 강조
 - 경제 부문에 대한 내각책임제 실시는 김정일 위원장 시대부터 강조되었지만, 당시에는 국방산업 우선 정책이 추진되어 왔음
- 박봉주 내각총리를 비롯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¹⁾ 당시 개혁·개방을 주도한 경제·기술관료 대부분을 재임용, 내각책임제의 추동력을 확보
 - 2013년 최고인민회의에서 박봉주를 내각총리로 기용하는 한편, 2002년 7.1 조치 당시의 핵심 인물인 노두철, 광범기 등 경제 관료들을 재임용
 - 2014년 최고인민회의에서 박봉주 내각총리를 유임하는 한편, 김정일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내각 총리의 현장 시찰을 공개적으로 보도

< 김정은 체제 하의 내각책임제 추진 주요 내용 >

일자	주요 내용
2012. 4. 6	· 北 당 중앙총위 위원들과의 담화 (4.6 담화) · 내각책임제 및 내각중심제 강화 언급 · 국가재정을 내각에 집중, '경제사령부'로서 내각의 권한 확대
2013. 4. 1	· 北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 경제 각료 대폭 교체 · 경제개혁의 상징인 박봉주를 총리로 임용, 경제 전문가 대거 임명 · 교체된 고위급 인물 27명 가운데 85%(23명)가 경제 전문가임
2014. 4. 9	· 北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 경제 각료 재신임 · 박봉주 총리 유임,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 유임
2014. 4월 중	· 北 최고인민회의 내각확대회의 ·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 것을 강조

자료 : 각 언론매체 종합.

1)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경제난 해소, 2중 경제 개선, 국가 재정부담 경감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격 및 임금의 인상, 노동생산성 향상, 배급제 개선, 공장·기업소의 자율성 확대 등임.

② (시장경제 시스템 및 경쟁체제 도입) 농업과 기업소 부문에 부분적 시장 경제 시스템 및 경쟁체제 도입²⁾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

- 2012년 6.28 농업개혁 조치 : 협동농장 개혁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분조관리제 개선과 수확물의 자율처분권 확대 등이 핵심 내용
 - 분조관리제 확대 : 분조별 생산성 평가를 통한 '차등분배' 원칙을 확립, 이를 위해 종전 10~25명 단위 분조를 4~6명 단위로 축소
 - 7.3 제도 도입 :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자율처분권을 크게 확대해, 목표생산량을 초과 달성할 경우 생산량의 70%는 국가가, 30%는 목표생산물 초과 분조에 처분권을 부여
- 2012년 12.1 기업소 개혁 조치 : 공장·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품을 결정하고, 가격과 판매 방법, 수익·배분도 자체 결정하도록 자율성 보장
 - 독립채산제 확대 : 기존에 제한적으로 실시되던 지배인³⁾ 책임경영제를 대폭 확대하여 각 기업소가 독자적인 생산 계획, 인원, 설비 등을 자율적으로 책임지게 조치
 - 차등 임금제 시행 : 기존 동일 임금 적용에서, 노동시간과 기여도 등에 따른 성과급제를 도입함으로써 일한 만큼 수익금을 차등 분배

<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체제의 '경제관리개선조치' 비교 >

	김정일 체제 (2002년 7.1 조치)	김정은 체제 (2012년 6.28, 12.1 조치)
농업 부문	· 분조관리제 실시 · 분조규모, 10~25명 · 초과생산물 자율처분권 사후 인정	· 분조관리제 전면 확대(분조 축소) · 분조규모, 4~6명 · 초과생산물 자율처분권 대폭 확대 · 생산량의 70%(국가), 30%(분조)
기업소 부문	· 제한적 지배인 책임경영제 실시 · 제한적 임금 인센티브제 도입 · 사실상 기업소, 분조별 동일임금 적용	· 지배인 책임경영제 전면 확대 · 차등 임금제 전면 도입 · 성과급 중심 분배(최고 100배 차등)

자료 : 각 언론매체 종합.

2) 농업부문의 6.28조치와 기업소 부문의 12.1조치의 경우 북한의 공식발표가 없음. 본 내용은 일본의 조선신보를 비롯해 국내외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정리한 것임.

3) 우리의 기업 경영자, 공장장에 해당됨. 북한의 지배인은 공장, 기업소의 경제관리운영의 모든 문제들을 결정함.

③ (외자유치 촉진) 외자유치와 수출 확대를 위해 '경제개발구법' 제정 등의 법·제도 정비와 함께 외자유치기구를 정비하고 특구정책도 확대

○ (법·제도 정비) 보다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위해 경제특구 관련 법·제도를 집중적으로 제·개정

- 외국인 투자법제 제·개정 : 외자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련 14개 법제를 집중적으로 제·개정함
 - 북한은 1980년대 공산권의 몰락으로 인한 경제난 해소를 위해 1980년대 중반부터 외자유치 관련 법·제도를 구축해 옴
 - 하지만 지속적인 외국인투자법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 미흡, 대외 신뢰도 악화, 낙후된 산업 인프라 등으로 성과가 미흡
 - 이에 따라 최근 외국투자기업의 재산보호, 3통(통행·통신·통관)의 자유보장, 지적재산권 보호, 신변안전보장 등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제·개정
- 경제개발구법 제정 : 2013년 5월 29일 채택된 경제개발구법은 북한 전역에 걸쳐 경제특구 확대가 핵심 내용이며, 단일 법 규정에 근거하여 외자유치를 도모하는 경제특구가 운영되는 것은 최초임
 - 특히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당 위원장과 인민위원장이 주도 권을 갖는 경제개발구 설치가 가능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데 의미가 있음

< 최근 북한의 외자유치·경제특구 관련법 정비 현황 >

일자	주요내용
2011. 11. 29	-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토지임대법 개정
2011. 12. 3	-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 제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개정 · 우편, 전화, 팩스 자유로운 이용, 외국인투자 자산의 국유화 금지, 토지이용권 및 건물소유권 취득 가능까지 범위를 확대, 소득의 송금, 투자재산 반출 자유 보장
2011. 12. 21	- 외국투자은행법,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외국투자기업등록법,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외국인투자기업회계법,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개정
2013. 5. 29	- 경제개발구법 제정 · 경제개발구는 크게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구분 · 특성별로는 공업, 농업,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로 구분

자료 : 각 언론매체 종합.

○ (외자유치 기구 정비) 본격적인 경제특구 확대를 위한 외자유치 기구로 '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조선경제개발협회'를 신규로 출범시킴

- 기존 경제개발기구 개편 : 2013년 10월 16일 '국가경제개발10개년 전략계획' 수행을 위해 설치했던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
 - 기존의 국가경제개발총국(4)을 위원회로 승격시킨 것은 2020년에 종료 예정인 '국가경제개발10개년 전략계획'의 추진력을 높여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해석
 - 이에 따라 기존의 합영투자위원회(합투위)가 수행해온 모든 대외 경제사업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짐
- 신규 경제개발기구 출범 : 북한은 2013년 10월 17일 각 도별 경제특구 개발과 외국기업 지원을 전담할 '조선경제개발협회'를 새롭게 출범
 - 조선경제개발협회는 경제특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유치는 물론, 각종 토론회, 정보 교류,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특구정책 확대) 지방 특성별 맞춤형 소규모 특구형태도 추가로 추진

- 지방급 경제개발구 발표 : 북한은 2013년 1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지방급 경제개발구 13개를 각 도에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
 - 기존 특구와 차이점 : 기존의 경제특구가 대규모 복합형 경제특구인 것에 비해,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지역별 특색에 맞는 소규모 경제특구임
 - 설립 목적 : 외화획득 및 지방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술획득, 주민생활향상에 이바지 할 목적이 있음을 강조
 - 지역별 현황 : 지역적 특색을 활용해 농업, 관광, 수출 부문을 중심으로 북중 접경권 5개, 서해권 3개, 동해권 5개 등 총 13개를 개발⁴⁾

4) 국가경제개발총국은 2011년 결정된 '국가경제개발10개년 전략계획'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국가경제개발전략 대상을 실행하는데 나서는 문제를 총괄하는 기구임.

5) 2013년 10월 노동신문은 신의주 및 기존 나선, 황금평, 금강산, 개성공업지구가 포함된 14개 중앙급 경제특구도 병행하여 추진 중이라고 밝힘. 【별첨】 참조.

< 북한의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현황 >

지방급 경제개발구		주요 산업	면적 (km ²)	투자액 (억달러)
북부 경제권 (5개)	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	- 현대농업 ⁶⁾ , 관광휴양, 무역 등	6.6	2.4
	자강도 만포경제개발구	-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등	3.0	1.2
	자강도 위원공업개발구	- 광물자원가공, 기계설비 제작 등	3.0	1.5
	함경북도 온성섬관광개발구	- 골프장, 수영장, 경마장 등	1.7	0.9
	양강도 해산경제개발구	-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2.0	1.0
서해권 (3개)	황해북도 송림수출가공구	- 수출가공, 관광휴양, 무역 등	2.0	0.8
	황해북도 신평관광개발구	- 휴양, 체육, 오락 등 복합 관광지구	8.1	1.4
	남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	- 수출 가공조립업 등	1.5	1.0
동해권 (5개)	강원도 현동공업개발구	- 정보산업, 경공업, 광물자원 활용 등	2.0	1.0
	함경남도 흥남공업개발구	- 보세가공, 화학, 건재, 기계설비제작	2.0	1.0
	함경남도 북청농업개발구	- 현대적인 농업개발구 건설	3.0	1.0
	함경북도 청진경제개발구	- 금속가공, 경공업, 수출가공업 등	5.4	2.0
	함경북도 어랑농업개발구	- 현대적인 농업개발구 건설	4.0	0.7

- 관리기관 : 국가경제개발위원회, 각 도 인민위원회 경제지대개발국
- 투자근거 : 경제개발구법
- 협력기간 : 총 50년
- 협력방식 : 합영개발기업 또는 외국투자자의 단독개발기업 설립 방식
- 우대조치 : 기업소득세 14%, 특혜관세 등
- 총 투자액 : 약 16억 달러 (지방급 경제개발구 당 평균 1.2억 달러)

자료 :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 투자제안서.

6) 현대농업이란, 기존의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농업과 축산 결합)를 바탕으로 농업과학연구기지 (채종 및 육종), 박막온실 등 현대식 채소재배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결합한 농업방식을 말한다.

3. 최근 북한 경제정책 평가

○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은 과거에 비해 대내 경제개혁을 촉진시키고, 대외 개방정책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① 경제운영시스템 강화 : 경제부처 권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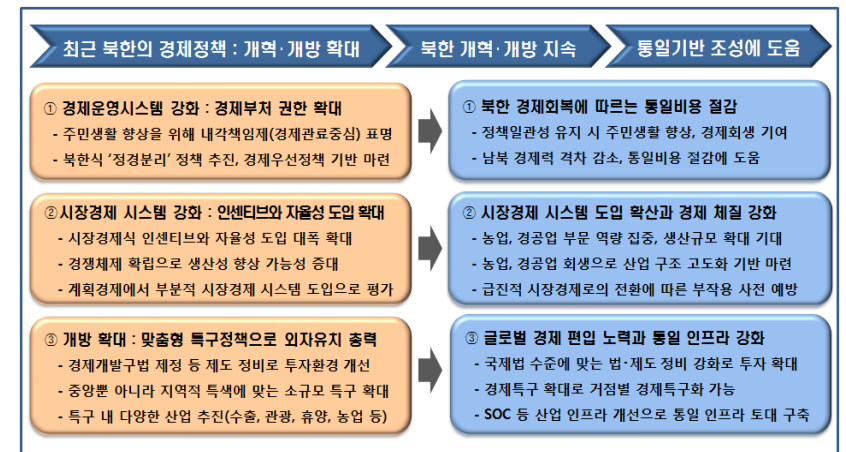
- 최근 북한은 주민생활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내각책임제를 강화했고, 이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

- '경제사령부'로서의 내각책임제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경제전문관료를 요직에 기용했고, 당·군·정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국가재정을 내각에 집중
- 이는 북한식 '정경분리(政經分離)'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경제우선정책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 경제운영 중심의 내각책임제가 지속될 경우 생산요소의 경제부문 투입 확대로 북한 경제 회생에 보탬이 될 것임

- 경제회생 우선 정책은 남북한 경제력 격차 해소 및 북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경제적 투자비용' 등 통일비용 절감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

<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이 통일기반 조성에 미치는 영향 >



② 시장경제 시스템 강화 : 인센티브와 자율성 도입 확대

- 인센티브와 자율성 도입 확대 등 시장경제 시스템 강화는 기존의 중앙계획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
 - 시장경제 체제 도입 확대는 생산성 향상과 산업 생산량 증가, 나아가 경제 체질 강화에 보탬이 됨
- 시장경제 시스템 도입 확산은 단기적으로는 농업·경공업 부문의 회생을,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강화와 산업 구조 고도화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됨
 - 농업, 경공업 회생을 통한 자생적 생산기반 확충은 중장기적으로 증화학공업, 첨단산업으로의 산업 고도화의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점진적 시장경제 시스템 도입은 본격적인 시장경제 전환에 따른 부작용 완화와 남북 간 이질적인 제도를 통합하는 데 소요되는 '제도통합비용' 감소에도 기여

③ 개방 확대 : 맞춤형 특구정책으로 외자유치 총력

- 경제개발구법 제정 및 전국 단위의 맞춤형 경제특구 확대 등은 보다 적극적·현실적인 외자유치 정책으로 평가
 - 과거에는 없었던 3통 자유 보장, 경제개발구법 제정을 통해 경제특구 정책의 통일성 확보, 신규 경제개발지구 출범 등은 이전에 비해 진전된 것으로 보임
 - 대규모 및 종합개발형식의 중앙급 중심의 경제특구 정책을 벗어나, 해당 지역의 산업과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지방급 특구개발은 실현가능성을 높인 맞춤형 개발방식으로 평가
- 대외 개방 확대는 글로벌 경제 편입과 통일 인프라 강화에도 도움이 됨
 - 국제 수준에 맞는 법·제도 정비는 외자유치를 통한 자본 확충은 물론, 북한 경제의 글로벌 경제 편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또한 소규모 맞춤형 경제특구 정책은 지역의 생산기반 확충에, 외자유치를 통한 산업인프라 개선은 통일인프라 조성에도 보탬이 됨

7) 실제로 2013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6.28 농업개혁 조치에 따른 시비량 증가 및 관개시설 확충, 양호한 기상여건,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하였음.

4. 시사점

- 먼저 최근 북한의 외자유치를 통한 대외개방 정책이 확산, 안정화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남북경협 확대가 필요하다.
 - 맞춤형 지역별 경제특구 확대 등 최근 북한의 외자유치 노력과 변화 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남북경협 확대가 요구됨
 - 북한의 인적·자원·지하자원과 한국의 자본·기술력이 결합하여 통일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남북경협의 단계적·전략적 접근이 필요
- 다음으로 북한이 개혁·개방경제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우리의 선제적 대북 투자 노력이 요구된다.
 - 대북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남한의 지원 필요
 - 우리의 선제적 대북투자는 북한의 對 중국 의존도 축소를 비롯해 한국의 신성장동력 확보, 통일비용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차원에서도 필수임
- 또한 남북 상호 신뢰 회복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는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는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남한에 대한 우호감을 증진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통일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됨
 - 문화, 학술 교류를 비롯해,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공동입장,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단일팀 구성 등을 통해 남북한 주민들의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이 필요
- 마지막으로 통일 대비 남북한 갈등 요소를 줄여갈 수 있는 다양한 통합 방안을 사전에 모색해야 한다.
 - 남북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소를 줄이기 위해 앞서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사례 연구를 비롯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통일준비위원회'에서도 이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용화 선임 연구원 (02-2072-6222, yhlee@hri.co.kr)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02-2072-6221, sjhong@hr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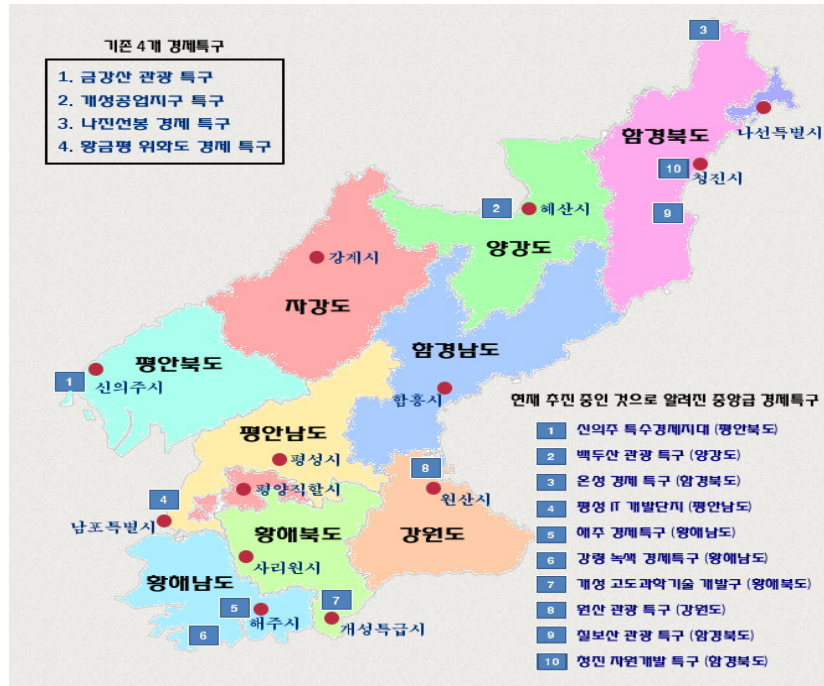
【별첨】 북한이 추진 중인 중앙급 경제 특구 현황

○ 북한은 앞서 발표한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병행하여 새로운 중앙급 경제특구를 개발할 계획인

- 기존의 4개 경제특구를 비롯해 10개의 신규 중앙급 경제특구 계획 중
 - 신의주 특구 : 2012년 홍콩 다중화 국제그룹과 계약 체결, 금융·무역·관광 등의 경제특구 개발 계획, 82km² 규모에 투자액은 1,000억 달러로 예상
 - 원산 특구 : 마식령 스키장을 포함, 종합관광지로 개발될 원산 특구의 개발 대상규모는 약 414.8km², 예상 투자액은 78억 달러 수준
 - 강령 특구 : 황해남도 강령군에 산업, 관광 등의 경제특구를 조성할 계획
 - 이외에도 북한은 해주, 온성 등에 경제특구를, 백두산, 칠보산 등에 관광특구를 조성할 계획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자료 :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 투자제안서.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2.3	2.1	2.7	3.4	3.7	3.0	3.9	3.8
	민간소비(%)	1.9	1.7	2.1	2.1	2.2	2.0	2.6	2.7
	건설투자(%)	-3.9	1.9	9.8	8.8	5.4	6.7	4.1	2.5
	설비투자(%)	0.1	-12.7	-3.9	1.5	10.9	-1.5	8.0	6.7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억 \$)	508	105	208	238	248	799	151	490
	무역수지(억 \$)	283	56	144	108	133	441	59	370
	수출(억 \$)	5,479	1,353	1,412	1,368	1,464	5,596	1,383	6,067
	증감률(%)	(-1.3)	(0.3)	(0.7)	(2.8)	(4.7)	(2.1)	(2.2)	(8.4)
	수입(억 \$)	5,196	1,297	1,268	1,260	1,331	5,156	1,324	5,697
	증감률(%)	(-0.9)	(-2.9)	(-2.8)	(0.3)	(2.5)	(-0.8)	(2.1)	(10.5)
소비자물가 상승률(%)	2.2	1.6	1.2	1.4	1.1	1.3	1.1	2.4	
실업률(%)	3.2	3.6	3.1	3.0	2.8	3.1	4.0	3.1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27	1,085	1,123	1,111	1,062	1,095	1,069	1,07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